대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만들기

한정화
기독경영연구원 원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문제의 제기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의 격차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사회안정성 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나 이중구조 문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원인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복지후생의 격차는 일자리 문제, 산업공동화 문제를 비롯 사회전체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2004년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3.3%로 전년도 3.2%에 비해 미미한 상승에 그쳤으나, 대기업은 10.2%로 전년도 6.0%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8.2%에서 9.4%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4.6%에서 4.5%로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상승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표 1 참조).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비교

		'99	'00	'01	'02	'03	'04
매출액 영업이익률(%)	중소기업	5.66	5.44	4.86	5.01	4.56	4.47
	대기업	7.38	8.21	6.03	7.54	8.16	9.43
매출액 경상이익률(%)	중소기업	3.27	2.92	2.72	3.38	3.17	3.42
	대기업	1.01	0.26	-0.58	5.42	5.96	10.23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이 결국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노동생산성 격차에 반영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지수를 놓고 볼 때, 대기업을 100이라고 볼 때, 93년도 69.7 수준에서 2002년 55.5로 떨어졌다. 매출액 대비 중소기업 임금지수도 93년 73.5에서 2003년 60.9 수준으로 낮아졌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면에서도 대기업이 1.72%이데 비해 중소기업은 0.8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 낮은 수익성, 낮은 연구개발 투자는 결국 경쟁적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대 ·중소기업간 격차가 점차 더 심화되자 일반인의 머릿속에 중소기업은 낙후되고 열등한 조직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져도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현상이 보편화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올 수 없고,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술력, 영업력 및 관리력 취약으로 인한 총체적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의 한계에 직면할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대기업과 공기업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의 기대

는 매우 낮다. 과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지만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부정적 경험 때문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사(2005)에 의하면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91.2%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라고 답했다.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3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05)에서도 67%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지원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관계개선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상생협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현상과 원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원인

1)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격차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현저한 힘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재벌기업집단을 비판하면서 중소기업 문제를 논할 때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교섭력이 강화된 반면 중소기업은 판로 면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졌다. 10대 산업의 상위 3사 시장지배율은 90년 55.1%에서 2001년 65.9%로 증가되어 대기업의 과점화가 심화되었다(중소기업청 외, 2003). 중소기업의 대기업 수·위탁거래 비중은 93년 40% 수준에서 2003년 52%로 높아졌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저가로 조달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상승 등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납품가격의 임의변경, 세부 기술자료의 요구, 과당경쟁유도 등에 의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탁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와 관련된 애로를 가장 크게 느끼며, 그 다음으로 '불규칙한 발주(수시발주)' 와 '납기 단축, 촉박' 등의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채산성 악화' 와 '위탁기업과 원가산정 상충' 등의 항목도 납품단가 문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단위 : %)

	지나친 품질 수준 요구	물품 수령증 교부 장기화	납품 단가 인하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불규칙 발주 (수시 발주)	납기 단축, 촉박	거래선 변경 시도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채산성악화	위탁 기업과 원가산정 시 상충	어음 할인료 미지급
'03	35.4	3.0	70.3	32.1	46.3	40.8	17.1	12.8	14.9	13.8
'04	**36.3**	**3.7**	**71.3**	**32.3**	**42.7**	**39.2**	**16.6**	**11.7**	**9.7**	**12.7**
증감(%P)	0.9	0.7	1.0	0.2	-3.6	-1.6	-0.5	-1.1	-5.2	-1.1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낮은 단가와 불규칙한 발주, 촉박한 납기 등은 모두 납품제품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다. 납기가 넉넉하고,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발주는 납품원가의 부담을 낮추지만 불규칙한 발주와 촉박한 납기는 납품제품의 생산원가를 증진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발주기업이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시발주와 짧은 납기로 그 부담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면 수탁기업에게는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에서 납품대금 장기화에 따른 갈등, 모기업의 거래선 변경 또는 복수화에 따른 불안, 거래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에서 발생하는 위화감, 신제품, 신설비 개발 등의 경우 기술가치 인정 미흡 및 모기업에 의한 관련기술 유출에 따른 불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수탁기업의 의존성

수탁기업이 기술, 도면, 원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탁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모기업 의존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탁중소기업들은 판로도 모기업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생산과 판매의 주요 활동과 필요자원에 관하여 모기업에게 매우 높은 의존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모기업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상 물품의 정적인 품질과 적기납품, 저가 구매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수탁기업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대기업인 모기업들은 주요 생산요소의 지원 이외에도 경영지도, 자금지원, 설비대여 등 수탁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호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상생발전보다는 현재 필요한 중간재의 원활한 수급, 즉 요구 품질의 확보, 낮은 납품가격, 적기수급 등 자신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수준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설비, 개발 노하우, 설계도면, 기타 기술 및 지식의 모기업에 의한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식개발 및 축적을 제약하여 모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교섭력 열위로 악순환되고 대 중소기업 협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3) 영세 소기업의 비중 증가

2001년에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체수가 105,088개를 기록, 처음으로 10만개를 넘어섰지만 전체 사업자의 49.6%를 점유하는 종업원 5~9인 중소사업체의 출하액 비중은 4.6%이다. 종업원수 5~9인 규모인 영세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4%에서 2001년 49.6%로 계속 높아져 왔다. 영세소기업 중심으로 저수익, 과당경쟁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세소기업 비중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구조조정 추진기업은 22.8%이며, 15.8%가 계획수립중, 52.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업구조조정의 추진방법으로는 사업전환(83.1%), 사업부문의 아웃소싱(37.7%), 생산설비 해외이전(16.4%), 기업인수합병(13.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음. 조사업체의 36.8%가 '사업전환 추진의향이 있다' 라고 답했다. 사업전환 추진 이유는 수익성 악화의 지속되어서(39.1%)로 가장 많았다. 이를 기업 규모면에서 보면 소기업은 수익성 악화(41.1%)를 주요인으로 든 반면, 중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해서(4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구조적 생산성 및 변화대응력 격차

자본장비율이 높고 기술력과 경영력이 우수한 대기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 생산성의 격차가 존재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소기업간 격차나 이중구조는 불가피하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갈등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성 격차도 힘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부가가치 창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가 일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대응력 취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는 개방화와 정보화 등이다. 개방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국제경쟁력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내수시장에도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도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에 의해 대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산업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시장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기존 경쟁력의 원천인 자본, 노동, 재정금융 수단들이 약화되고 지식창출과 기술혁신 등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했음. 기업들은 핵심역량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sourcing)을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혁명의 가속화, 디지털 네트워크화로 인해 산업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디지털 제품, 주문생산, 민첩생산 등 지능형 생산시스템과 ERP 등으로 경영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공급망관리와 고객관계관리 등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간 제휴와 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거래관계의 구축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지식과 정보 등 새로운 생산요소가 자본, 노동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보완, 대체하여 부가가치의 핵심적인 창출원으로 기능하게 되며 이는 부가가치 요소 및 수요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 및 기술의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화, 개성화 되는 추세임.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4. 경영성과 격차와 성장잠재력 약화의 악순환

1) 금융위기와 자금조달의 양극화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는 자금조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금융관행의 선진화, 수익성 차원에서 중소기업 여신확대, 금융기법 선진화로 신용과 금리를 연계하여 여신을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에 대한 접근, 금융비용의 절감 등 유리한 요소가 많아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규모가 클 수록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중소기업 비중은 37.9%에서 24.9%로 줄어들고, 반면에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8%에서 42.4%까지 높아졌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은행거래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03년말 2.1%에서

2004년 3월말 3%로 상승했다.

2)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부진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태이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설비투자 규모가 감소하여, 2003년 4조 6,885억원으로 2002년 대비 4.3% 감소했다. 설비투자 위축으로 유형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부진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하였다. 중소제조업 전체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액 비율은 0.89% 수준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기술개발 투자업체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액 비율은 2.23% 수준이다. 주력제품의 기술수명주기상 위치에서 보면 도입기 단계의 기술이 12.1%에 불과한 반면 성숙쇠퇴기의 기술은 48.8%에 이르고 있다.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성숙, 쇠퇴기단계의 기술개발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말 기술개발 참여 중소제조업체 비율은 18.1%이다. 기술개발 인력은 업체당 4.5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순수 연구인력은 3.1명이다(2002년 기준).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반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않는다.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부족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박사, 석사와 같은 고급인력일 수록 부족율이 크게 높은 편이다.

3) 인력부족

중소제조업 상시종사자수는 193만명, 기업체당 평균 1.6명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6.23%, 부족인원은 139천명에 이른다. 직종별로는 기술, 기능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인력수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경우는 상황이 나쁜 상태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이러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난 일차적 원인은 임금격차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수준은 대기업 임금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1980년 대기업의 80.2% 수준에서 2001년에는 55.4%까지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1985년 47.1%(대기업=100)에서 2001년에는 34.1%까지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대적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지만, 부가가치 생산성을 감안한 실효임금은 오히려 대기업을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수용한다면 결국 중소기업의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한다.

인력부족률은 연구개발직이 10.9%, 영업마케팅직 10.2%, 생산직 6.8%, 사무직 및 기타 4.1%임. 생산직에서도 단순근로자 보다는 기술직 인력부족률이 높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인력확보가 더 어려운 상태이다. 인력확보의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에 비한 임금격차(41.1%), 지방근무기피(40.5%), 대기업선호(29.6%),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29.3%), 열악한 작업환경(28.7%), 잦은 이직 및 타업체 스카우트(20.6%) 등이다.

인력관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인건비(60.4%), 잦은 이직(39.3%), 생산직의 고령화(19.7%), 복리후생(10.6%) 등임. 응답업체의 79.9%가 생산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생산시설 가동 및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직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2년 미만 30.4%, 6개월~1년 미만 27.7%, 6개월 미만 20.9% 로 근무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9.0%로 나타나 있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이동율은 대기업에 비해 2-3배 가량 높다. 짧은 근속연수와 잦은 이

직은 인력관리 비용의 상승과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저해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

5. 대 중소기업간 격차해소방안

1) 대기업의 역할

상생을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생태계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 대기업 주도적인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중소기업을 공생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경영진, 노조 및 중소기업 경영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기적 거래비용 절감의 차원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계약에 근거한 안정적 구매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노력으로 달성된 성과향상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부 사업본부별 업적 평가시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공생협력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 직원들이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내 홍보를 강화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에 의한 성과향상 및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사업부의 성과평가에 중소기업과의 협력지원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기적 성과중심, 일방적 편의주의에 입각한 수탁중소기업 이용하는 관행의 탈피가 필요하다. 사업본부장 평가시에도 단기적인 업적평가 외에 중소기업 지원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윤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리베이트 등의 비윤리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노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경영혁신 등과 함께 대기업의 해외진출시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완성품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노동운동 연대의 관점에서 해당 수탁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위한 양보와 배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수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지속은 결국 저기술로 인하여 완성품의 품질과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모기업은 관행적으로 수탁중소기업의 기술자료에 접근하거나 쉽게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수탁기업이 모기업에게 새로운 설비나 프로그램의 제안,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안과정에서 노출된 아이디어, 기술, 도면 등을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수탁기업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모기업이 운영주체인 경우가 많다. 상생협력보다 대기업인 모기업의 거래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완제품별 부품소재 기업의 개방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 해당 부품소재 산업 전반의 하부구조를 조성함으로써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종 제품별 수탁기업협의회에의 참여유인하기 위해 기업별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홍보, 협의회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문기회 제공,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회원사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 부품 표준화 사업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이다.

2) 금융시스템의 혁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금융기관 운영방식은 우수한 소수의 중소기업에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갖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는 문턱이 높은 중소기업 금융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평가해서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강화하여, 신용과 역량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로서 유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보증대출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입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개인의 위험이 매우 크다. 사업실패시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 희생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어 기업가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한다. 보증기관은 기업가에 대한 구상권을 통해 보증을 회수하고자 하나 실효성이 매우 낮다. 실패의 위험이 높은 기술창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 경우 개인입보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실패기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3) 해외시장의 적극적 진출

한국은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필요에 의해 창업당시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KOTRA, iPark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보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정보제공을 위한 DB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바이어와의 접촉기회를 늘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교류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가 풀이 있어야 하며,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 관련 인프라 혁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원인은 지속적인 요소비용의 상승 때문임. 중소기업 전용 유통, 물류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할인점과 함께 권역별 중소기업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집적지의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현재 대부분의 공단지역은 교통난, 주택난, 교육여건의 미비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있다. 초중고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교육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을 통

해 다양한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성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내 탁아시설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탁아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공동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지조건의 악화로 인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아파트형 공장 등 중소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입지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주고,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 직원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의 예시에 모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해주지 않는 사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모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준의 일방적인 임률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나 납품가격 결정시 세부 원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도 부당행위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공정거래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불공정 거래행위로 입은 이득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 중 많은 금액의 3배 이상의 배율을 배상하게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기업은 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3년간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절차의 비용과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풀을 구성하여 저렴한 비용의 법률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부록: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의 주요 내용

□ 경영혁신 지원

-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성과공유제 도입 등이 비교적 활발함.

- 대기업 중견인력 또는 은퇴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품질관리,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지원.

□ 기술지원

- 가장 활발한 것은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품질관리 지원 등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함.

□ 자금지원

- 최근 현금결제가 확대되고 있음. 네트워크론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직접적인 금융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네트워크론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 제도는 구매기업으로 수주를 받은 중소기업이 수주금액의 일부를 은행이 계약시점에 대출해주고, 납품대금 수령시 상환토록 하는 생산자금 지원제도임. 납품실적만을 근거로 융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 및 담보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협력사업

- 교육훈련 지원이 가장 활발하고, 원자재 공동구매, 해외시장 공동개척, 동반진출 등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교류를 강조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표 3> 기업별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삼성SDI	STX조선	금호타이어	동양물산	롯데건설	SKT
경영관리/제도개선	전담조직운영	O	O	O	O	O		O		
	윤리/투명경영			O		O				O
	우수협력업체 인센티브					O	O		O	
	성과공유	O		O				O		
기술지원	기술이전	O			O					
	기술지도 및 자문		O	O	O		O	O	O	O
	공동기술개발	O	O		O		O			O
	품질향상		O		O		O	O		O
자금지원	직접금융지원	O	O			O			O	
	현금결제확대	O		O	O		O	O		O
	네트워크론			O	O	O		O		
공동협력사업	원자재 공동구매	O		O	O	O		O		
	해외진출/수출지원		O	O	O		O	O	O	O
	정보교류		O		O		O		O	
	협력업체 협의체 운영				O	O				
	교육훈련	O		O	O		O	O	O	O

자료: 기업별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보고서 바탕으로 작성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0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

강현수, 2005. “대기업 주도 생산연계의 협력관계와 공간적 특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본부와 그 협력업체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2), 217-236.

권기대, 이상환, 2003. “벤처기업-대기업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의존성, 권력, 신뢰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6권 2호, 53-75.

김승일, 2005. “대·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 『기은조사』, 가을호, 8-24.

윤성민, 홍장표, 정우식, 2000.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협력유형 및 산업정책”,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2호.

이충희(2005), 중소기업간 거래의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기은조사』, 가을호, 25-67.
산업자원부, 2003.『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

중소기업연구원, 2005. 『대·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

중소기업연구원, 2005. 『 대·중소기업 협력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중소기업 애로실태 종합보고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2004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중소기업 경영지표』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3.『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최공필, 2004. “구조적 양극화 완화방안”,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14권 1호.

한국은행, 2004. 『기업경영분석』